

# 지자체 권한·재원 중앙정부에 예속... '홀로서기' 버겁다

자치 입법·행정·재정권 없어 소멸 위기 극복 어려움  
광주·전남, 지방의회 일당 독점에 '무용론'까지 거론

## 지방자치 30년

### <중> 지방자치의 한계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과 밀접한 민원 해결, 생활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제도 운영만으로는 지역의 홀로 서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없는 상태의 지방자치는 '팔 없는 팔뚝'이나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자치단체장과 시·구·군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견제 없는 일당 독점에 따른 지방자치의 폐쇄성 등 여러 한계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제자리걸음... 지방자치 '무용론' = 지역정가 등에서 개헌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자치단체에게 행정과 재정 집행권만 부여하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묶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곁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부활 당시 대통령 직선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중심의 편성을 답습한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방교부세 등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약속했지만, 권한 이양 없이 형식적인 지방시대만 반복한 점도 지방자치 제자리걸음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진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지방분권 논의는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이 도입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개막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의결이 잇따랐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후속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당 독점·재정권 없는 것도 '한계' =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한 당에 소속돼 있어 지방자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지금껏 지방선거가 경쟁을 통해 '지역의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중앙정당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로 치러진 점도 지방자치가 지방에 자리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점'이다 보니 그동안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의회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내 소속 의원들 간 '불협화음'도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방이 지방자치 제도만 가지고 있을 뿐 지방자치권이 없는 것도 지역의 역량을 억누르는 방해물이다. 2022년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권 확대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개정안조차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화두로 = 부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안정한 지방자치 대개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집행·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 지자체 간 협력 등은 필수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당 독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은 그런 경쟁들이 생략되면서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각 행정구역 속에서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전 지자체 간 협력 등으로 지방자치의 낭비와 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우원식 의장, 시진핑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 7일 중국 하이룽상성 하얼빈시 타이안다오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 여 "현재, '답정너' 재판"...야 "탄핵 공작설은 망상"

### 여야,尹 탄핵 심판 신경전

여야는 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말장난과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하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현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재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범죄"라면서 "현재가 이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정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현재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

을 통해 "윤석열씨가 강력히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장원 전 국무원 차장, 박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이어 또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방첩사 간부나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제 더 이상 의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며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년간 항공기내 배터리 화재 13건... 객실 좌석 10건 가장 많아

국내 항공기에서 지난 5년간 배터리 화재가 13건 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는 총 6건 있었다. 2020년에는 1건 발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보고된 화재가 없었다. 2023년엔 6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 모두 연기만 있는 경미

한 수준이었다. 짧게는 20초, 길게는 5분 안에 진압됐다.

화재 위치별로는 객실 좌석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객실 선반과 후방 캐리가 각각 1건이었다. 탑승 중에 발생한 화재도 1건 있었다. 좌석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모두 큰불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빠른 대응을 위해 승객이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배터리 종류별로는 보조 배터리가 9건, 전자담배와 스마트폰 배터리가 각각 1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3건, 제주항공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이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내 선반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